

---

---

# 환경불평등, 우리시대의 시급한 환경 과제

－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 10대 과제(요약) －

---

---

2017. 4

환경정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2층 / T 02-743-4747 F 323-4748

## 환경불평등, 우리시대의 시급한 환경 과제

오늘날 환경을 이용하면서 받는 혜택과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 환경을 매개로 특정계층, 집단이 겪는 환경불평등, 환경부정의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며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이며 이를 겪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의 시기

오늘날 환경문제는 도시계획, 토지이용, 농업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이용, 먹거리 문제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 관련 의제의 확장은 기존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확장된 책임의 영역과 변화된 관점의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OECD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우리시대의 시급한 환경정의 과제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환경정의가 권리적 측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환경불평등, 환경부정의가 정부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환경부정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개인과 집단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그 피해가 물리적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환경민주주의 실현 또한 시급한 환경정의 과제이다. 지역사회의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의 결정 과정에도 지역 주민들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제는 주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는 물론 일반국민과 환경NGO등 공공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민주주의의는 우리사회의 잠재적 환경갈등과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환경불평등, 우리시대의 시급한 환경 과제

-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 10대 과제 -

## 1. 환경정의의 법제화

-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 및 정책 목표, 내용 규정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구현 기본계획(가칭)' 수립·운영
-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 이념을 '지속가능한 환경정의'로 포괄 확대
- 환경불평등이 나타나는 영역(매체)은 '환경정의 특별관리대상(가칭)', 환경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을 '환경정의 취약지구(가칭)'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 도입

## 2.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보장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 환경관련 규제 개발 및 완화 결정 과정에 공공·시민 참여 제도 도입
- 환경·에너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주민투표 등) 보장
- 환경NGO 및 일반 시민의 주요 환경정책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

## 3.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강화

- 전원개발촉진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혹은 전면 개정
-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정의 평가' 항목 추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과정 주민 의견 개진 보장 및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공지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 4. 환경정의성 평가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 계층·지역·세대 간 환경정의성 평가 지표 개발
- 환경정의성 평가 방법 및 체계 구축
- 환경정의성 평가 정보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제작

## 5.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정책전환

-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탈원전·탈석탄 국가 에너지 로드맵 수립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6.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립과 먹거리정의 실현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재원 확보

- 먹거리 보장 관련 각종 제도 및 집행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 학교, 복지관, 병원,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 분야 지원 확대
- 아동먹거리 종합대책 수립
-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공공급식 기준 마련

#### 7.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 강화

- 미세먼지·NOx 법 제정 및 제도 정비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등 고농도시 대책 강화
-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대기환경문제와 친환경에너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
- 국가 지정 대기오염물질(61종)을 선진국 수준인 150종 이상으로 확대
- 중국과 미세먼지 환경협정 체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이동 저감을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및 기술협력 체계 구축

#### 8. 유해화학물질 노출 감시 체계 마련

- 중독관리센터(Poison Control Center)설립
- 현재 7개 정부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중독정보 통합 및 노출 모니터링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독성물질 예방 대책 제시

#### 9. 어린이 환경권 보호 및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관리체계 일원화

-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관리 체계 일원화
-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환경취약계층 생활 시설 및 주변 대기질 관리 강화
- 저소득층 어린이 환경성 질환자 의료비 및 관리 비용 지원
- 노후·경유 통학차량을 친환경 통학차량으로 전환 유도 및 비용지원

#### 10. 생태계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확대 및 환경피해 집단소송법 도입

- 환경오염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질 및 생태계 피해에도 공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
- 생태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단체에게 소송자격 부여
- 환경분야 집단 소송제 도입